

# 6월 기온 역대급 더위→장마로 마무리

## 상·하순 고온, 중순 저온...변동폭 커 중순 찬공기 유입, 장마전선 북상막아 26일 전국에 비 내리며 본격 장마 시작

지난달 때 이른 무더위와 때늦은 장마가 번갈아 한반도를 덮었다. 1일 기상청이 발표한 6월 기상 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상·하순에는 고온현상이, 중순에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나타낸 날이 계속되면서 다소 큰 기온 변동폭을 기록했다. 고온의 원인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남서풍의 영향이다. 여기에 낮동안 강한 햇빛까지 더해져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났다. 지난달 5일 양산시 32.7도, 거제도 32도로 관측 이래 일최고기온 4위를 다시 썼고, 같은날 합천은 35.7도로 역대 5번째로 더운 날이 됐다. 월 중순에 접어들면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유지했다. 배령호와 바이칼호 북동쪽 약 5.5km 상공에 기압능이 발달하면서 기압계의 등서흐름이 느려졌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와 오호츠크해 부근에는 상층 기압골이 위치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유입됐다. 그 여파로 장마도 평년보다 늦게 시작됐다. 상층 기압능이 발달하면서 자주 유입된 찬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과 장마전선의 북상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았다. 장마 전까지 전국 강수량은 64.1mm로, 평년 84.5~139.5mm 보다 현저히 적었다. 본격적인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은 것은 26~27일, 29일이다. 전국에 비가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12년 만에 전국에 같은날 장마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평년보다 6~7일 늦게, 남부지방은 3일 늦게, 중부지방은 1~2일 늦게 장마가 시작됐다. 평년의 장마시작일은 제주도 19~20일, 남부지방 23일, 중부지방 24~25일이다.

## 30세대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의무화된다

앞으로 소규모(33~99세대)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에도 실내 공기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내달 12일까지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30세대 미만의 건축물과 단독주택도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또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도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외부 미세먼지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해 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현행 40%에서 60%로 1.5배 강화된다.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의 경우 성능기준도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높여, 현행 대비 강화 1.2배 강화한다. 또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미세먼지 민원이 최근 3년 간 매년 2배씩 증가했다는 정부 집계 나타났다. 미세먼지를 줄일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약화와 생활 갈등 발생도 주요 민원 대상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미세먼지 민원과 최근 1년 2개월간(2018년 1월 1일~2019년 2월 28일) 민원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 민원이 최근 3년 간 매년 약 2배씩 늘었다. 2016년 7637건에서 2017년 1만9144건, 2018년에는 3만5813건에 달했다. 사상 초유의 초미세먼지(PM2.5) 공습이 이어졌던 올해 들어 2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5706건이었다. 특히 최근 1년 2개월 간 접수된 민원의 38.2%(5603건)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연꽃 개화에 산책하는 시민들 1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공원에 연꽃이 개화하기 시작하자 시민들이 연꽃을 바라보며 산책을 즐기고 있다.

## 미세먼지 민원 매년 2배 급증...‘저감대책 요청 최다’

있었다. 5건 중 2건 꼴이다.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와 마스크 지급 등 정부 지원을 요 구 하는 민원은 24.4%(3579건)였다. 대상별로는 일반 국민(75.6%)에 이어 '영유아·어린이'(17.4%), '노인·장애인'(5.9%), '군인·예비군훈련자'(1.2%) 순으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여겼다. 분석 대상 민원 중 21.1%(3091건)는 교육 현장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었고, 13.5%(1972건)는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 및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요구였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차량 또는 선박의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민원은 전체의 2.8%(404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와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특위)를 발족시켰다. 미세먼지특위의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18년 23㎍/㎥에서 2022년 17~18㎍/㎥로, 실내 미세먼지(PM-0) 농도는 2017년 39㎍/㎥에서 2020년까지 35㎍/㎥로 저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를 검토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차 수출 시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법원 “버스기사 무사고 月수당, 상여금 아닌 임금에 해당한다” “매월 고정 지급...근무성적 따른 변동 없어” 무사고 관광버스 주행 조건으로 매달 지급하는 수당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속관광버스 회사 대표 장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 고의나 통상임금 위약 예정 금지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구리에서 고속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장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근무한 기사 김모씨가 퇴직한 뒤 교통사고 공제비 120만원 등 임금을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

학벌없는사회, 인권 침해·선발 과정 불평등 없애기 위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일 “일반고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노력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 침해와 기숙사 선발 과정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없애기 위한 대안 차원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29일 ‘성적 만을 기준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광주지역 4개 고교와 시교육청에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정확한 교육감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일반고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2018년부터 3년 동안 18억원을 들여 9개 교의 기숙사를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사립고는 신청이 전혀 없고 공립 1곳만 유일하게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광주 28개 고교가 기숙사를 운영 중인 가운데 22곳이 사

립”이라며 “대다수 사립고가 기숙사 운영을 명문대 입시도구로 악용하거나 경쟁을 부추겨온 것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신청방식으로 지속할 경우 단지 몇몇 학교의 노후시설 보수나 리모델링 기회로 악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 교육청이 공립고를 우선 지정할 후 기숙사 폐지와 해당 사업을 집행하고 기숙사를 폐지한 공립고의 선례를 바탕으로 사립고 인식을 개선해 모든 고교 기숙사가 학생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복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기숙사를 단계적으로 폐쇄 또는 축소해 진로지원 또는 학생종합공간으로 전환,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판결 저런판결**

### 대법원 “버스기사 무사고 月수당, 상여금 아닌 임금에 해당한다”

“매월 고정 지급...근무성적 따른 변동 없어”

무사고 관광버스 주행 조건으로 매달 지급하는 수당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속관광버스 회사 대표 장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 고의나 통상임금 위약 예정 금지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구리에서 고속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장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근무한 기사 김모씨가 퇴직한 뒤 교통사고 공제비 120만원 등 임금을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태치로죽, 자랄치로, 영민 민력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임신기부터 출생후까지,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